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Health-Related Life Cycle Risks and Public Insurance

■ Daniel Kemptner.

SOEppapers published by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DIW). 39p. 2013.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연계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한 반면 건강이 소득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건강상태는 노동 시장 참여와 조기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나쁜 건강으로 인한 취업포기나 이른 은퇴는 개인의 생애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위험, 취업상태, 조기퇴직, 그리고 부의 축적에 관한 변수들을 이용한 동적 프로그래밍 이산선택(Dynamic Programming Discrete Choice, DPDC) 모형을 통해 건강상태에 따른 소비 수준 변화와 노년기 빈곤층 편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참고로 매 기에 건강악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40세 때

재산축적 정도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데이터는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에서 제공하는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중 독신 남성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해도 파트너가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건강악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모형 분석의 결과, 건강 악화로 인한 생애 소비의 기대손실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 개인의 재산축적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약 3%에서 7%의 손실 정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별로 보았을 때는 40세까지 모아둔 재산이 전혀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대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보다 젊은 나이에 건강이 악화된 경우 생애소비의 기대손실은 더욱 심각했다.

또한 40세까지 축적한 재산이 적거나 한동안 실직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분류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이 결과를 이용하여 노년기 빈곤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저연금혜택 제도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ong-Term Effects of Diabetes Prevention: Evaluation of the M.O.B.I.L.I.S. Program for Obese Persons

■ Jan Häußler and Friedrich Breyer.
SOEppapers published by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DIW). 22p. 2013.

지속적인 비만 인구의 증가는 선진국들이 국민 건강에 관하여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2009년과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성인 비만인구는 35.7%이며, 스페인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의 경우 약 14.7~23% 사이로 나타난다. 이는 섭취하는 칼로리가 늘어난 것에 비해 신체활동은 줄어들어 발생한 현상으로, 당뇨병 등과 같이 비만으로 인해 초래된 여러 합병증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WHO는 정부차원의 비만 초기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비용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내인성 장애군에 속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만 예방 정책의 비용효율이 정말로 높은지 알아보기 위

해 독일의 비만인구 축소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인 M.O.B.I.L.I.S.의 시행 결과 및 장기에 걸친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다.

M.O.B.I.L.I.S. 는 비만인구 축소를 위해 2005년부터 독일 전역에서 실시된 운동 기반 프로그램으로,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에게는 계약금 일부를 제외한 참가비 전액을 돌려줌으로써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참가자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로부터 평균 4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수연구에서도 BMI와 같은 비만도 지표가 교정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준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혈압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같은 의료위험 지표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M.O.B.I.L.I.S.의 장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집단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한 후 마르코프 모형을 통해 각 집단의 미래 건강상태 추세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순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참여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당뇨 발병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만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목표 집단을 설정한다면 비만 초기예방 정책을 통해 복지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Cancer Care: Assuring Quality to Improve Survival

OECD. 159p. 2013. ISBN(9789264181052)

이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암 현황을 짚으며 모범 치료사례의 공유하고, 의료개혁의 고취, 암 치료 결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와 35개국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OECD 국가가 암 치료에 할당하는 자원배분량의 차이와 치료법, 암치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암 생존의 국제적 차이는 각기 다른 암 치료 정책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각 회원국의 암 치료 정책동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접근은 유방암, 대장암 폐암의 생존율과 사망률에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암은 OECD 국가 중 약 500만명 이상, 평균적으로 100,000명당 261명이 걸리는 질환으로 남녀 모두에게 심장마비와 뇌졸중보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분류된다.

암 질환은 현재 전체 의료비의 약 5%를 차지하며 생존연장, 늘어나는 암 발생건수, 비싼 신약과 치료법은 향후 암 지출비용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 환자와 간병인은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세계적으로 암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장애로 약 9천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 질환의 약 33%는 적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고, 나머지 33%는 더 폭 넓은 영향력이 있는 공공의료정책이 있다

면 완전히 예방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암 생존율은 OECD 국가간 약 4배의 차이가 있고 특히, 동유럽 국가의 생존율은 OECD 다른 국가보다 계속해서 더 낮은 실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상적 암 치료는 현재 잘 구축된 점을 언급하며 조기 발견에서부터 진단, 치료, 모니터링과 완화치료까지 전 환자경로를 다루는 증거에 기초한 임상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심리사회적 지원과 임상팀과 환자, 간병인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고려한 전체적 접근차원에서 암 치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암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세 가지 정책분야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째는, 자원부문으로 치료제, 의료장비, 의료기관과 의료인력까지 모두 포함하며, 둘째는, 실행으로써 예방작업과 암 검사같은 증거에 기초한 치료를 시기적절하고 받고 치료서비스 접근성의 용이성을 말한다. 셋째는, 관리부문으로 치료 대상과 치료 가이드라인과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수단 외에 의료서비스 승인과 전문의 자격증같은 치료의 규제적 측면까지를 모두 고려한 국가적 계획 설립을 언급하며 정책적 역할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Strengthening the Canada Pension Plan: Take it to the public

Ken Battle, Sherri Torjman, Micheal Mendelson
Caledon Institute of Social Policy. 11p. 2013.
ISBN(1553826086)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는 2013년 9월 기준, 자산이 1,928억달러(한화 204조원)로 세계 연기금 중 자산의 규모가 6위인 캐나다의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적연금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들은 CPPIB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Strengthening the Canada Pension Plan: Take it to the public”에서는 CPPIB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11월 1일에 지방정부의 재무장관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CPPIB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필자는 보고하고 있다.

- 현재의 부분적립방식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
-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중산층에 대한 연금급여 증액
-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

위의 방안들은 12월 연방정부 재무장관회의에서 상정하여 다시 논의되었으나 즉각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3년 전 유사한 CPPIB 발전방안들이 연방정부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일부 연방정부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통과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재무 장관인 Jim Flaherty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높은 연금급여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CPPIB 강화방안의 적용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PPIB의 강화방안을 적용하더라도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경제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PPIB의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 관계자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연금수급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의 개혁방안에 노동조합, 사업자 단체, 금융 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캐나다 국민들은 현재 CPPIB의 실무자와 정부 관계자에게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논리적인 근거가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과정이 개설되길 바라고 있다. 만약 새로운 보험료율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새로운 보험료율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는 “실무평가위원회”라는 협의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실무평가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국민연금 실무자, 금융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연금 가입자 대표가 모여 국민연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국민연금이 운영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와 실무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does CalPERS' activism add value?

■ Thomas I. Smythe, Chris R. McNeil, Philip C. English II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20p. 2013.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은퇴연금인 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연금이며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지배구조 개혁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캘퍼스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에 의거한 투자활동이 개별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업 특성이 반영된 설명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CalPERS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필자는 CalPERS가 19년(1987~2006년) 동안 투자한 81개의 기업의 누적비정상수익률(CAR)을 사용하였고 또한 81개 기업에 대한 이사회 구조, 소유구조, 과거 실적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누적비정상수익률의 기준일은 CalPERS가 투자 목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언론에 발표하는 당일이며, 투자 발표일 10일 전부터 투자 발표일 10일 후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CalPERS가 투자한 81개 기업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자산은 125억 4천만 달러였으며, CEO의 평균 지분은 1.80%, CEO를 제외한 임원의 평균 지분은 4.02%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규모는 평균 10.54명으로 분석되었다.

CalPERS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투자 목

표 기업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자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CalPERS의 누적비정상수익률(CAR)을 종속변수에 두되 극단적인 누적초과수익률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위 5% 이내, 하위 95% 이외의 수익률은 분석에서 배제시켰다. 설명변수에는 투자 목표 기업의 5년간 주식 수익률, 투자 목표 기업의 규모, 투자 목표 기업의 레버리지, 투자 목표 기업의 특성(이사회 구성, 기업 소유 구조 등)이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과거실적이 좋지 않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누적비정상수익률(CAR)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CalPERS가 투자를 발표함으로써 경영 및 지배구조를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실적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자국 경제에 순기능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공적연금이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를 실행한다면 기금의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의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번역 | 장수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주성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